

주간 통일정세

2015-23

Contents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정치
4. 경제
5.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북한, 해외파견 근로자 인권침해 부인...“참을 수 없는 모독”(6/11, 조선중앙통신)
 -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11일 담화를 통해 “남조선 괴뢰패당이 우리 해외파견 근로자들의 ‘인권’ 문제라는 것을 고안해내 또 하나의 반공화국 모략 광대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함.
 - 대변인은 “이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훼손하려는 용납 못 할 도전이고, 부강조국 건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며 “전체 노동계급의 이름으로 단죄 규탄한다”고 강조함.
 - 대변인은 남한이 탈북자들을 내세워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해외파견 근로자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고 주장하고 과거 남한의 해외파견 근로 전례를 지적하며 험담하기도 함.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북한 “6·15 공동행사 무산 남한 정부 부당개입 탓”(6/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8일 ‘통일행사를 파탄시킨 장본인’이라는 논평에서 “괴뢰당국은 6·15 민족공동행사에 대해 처음부터 달갑지 않게 여기면서 행사 합의를 위한 실무협의를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6·15 민족공동행사 무산과 남북 관계가 과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남한 정부에 있다고 주장함.
 - 북한은 특히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앞길을 열어나갈 통일행사에서 정치성을 배제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남한 정부의 입장은 “행사의 기본 알맹이를 뽑아버리려는 술책”이라고 비난하고, “고의적 방해 책동으로 행사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될 수 없게 됐고 북과 남, 해외에서 각기 치르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이런) 현실은 행사가 파탄된 책임이 남조선 괴뢰당국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한다”고 강조함.

- 북한 “남한, 전염병 퍼진 판국에 누구보고 험담질인가”(6/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8일 ‘주제넘은 녀두리’ 제목의 단평에서 최근 정의화 국회의장이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법안을 발의하며 북한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지적한 것을 두고 “참으로 주책머리 없는 행실”이라고 험담하고 남한의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 사태를 언급하며 반박함.
 - 신문은 “최근 남조선에서는 호흡기성 전염병이 급속히 퍼져 사람들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다”며 “이런 판에 도대체 누구보고 험담질인가”라고 비난하면서 이어 “하기는 남조선 인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탄저균을 마구 끌어들이는 미국 상전에게 항변 한마디 못한 쓸개 빠진 자이고 보면 별로 놀랄 것도 없다”고 혈뜬음.

- 북한 “남북관계 개선 위해선 6·15 공동선언 이행해야”(6/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남조선 당국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존중하지 않고 그 이행의 길에 나서지 않는다면 북남관계의 전도는 절대로 밝아질 수 없다”고 주장함.
 - 신문은 6·15 공동선언 발표에 대해 “반세기 이상 지속된 불신과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과 평화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놓은 특대사변이었다”고 평가함.
 - 북한은 “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그때와는 너무나도 대조를 이루고 있다”며 “대화와 협력은 간데없고 이 땅을 감도는 것은 괴뢰당국이 외세와 작당해 몰아온 싸늘한 대결의 냉기와 전쟁의 검은 구름뿐”이라고 비난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北, 억류 南 국민 송환 촉구 정부 통지문 접수 거부(6/12, 연합뉴스)
 - 통일부는 12일 “정부는 오늘 오전 북한에 억류돼 있는 김정욱 씨, 김국기 씨, 최춘길 씨, 주원문 씨의 석방 및 송환을 요구하는 통일부 명의 대북 통지문을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앞으로 발송하고자 했으나 북한은 접수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통지문은 북측에 억류된 국민의 소재와 건강 상태에 대한 통보, 가족과 당국자

또는 변호인 접견 허용, 조속한 송환을 촉구함.

라. 대남 군사 관계

- 북한 “한국전쟁 당시 불발탄 다량 발견”(6/8,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8일 개성시 고남리와 황해북도 장풍군 등에서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사용한 폭탄과 포탄, 지뢰, 수류탄, 총탄 등 불발탄이 다량 발견됐다고 보도함.
- 북한군 군사분계선서 두달째 ‘수상한 작업’…지뢰매설하는 듯(6/14, 연합뉴스)
 - 북한군이 전 전선의 군사분계선(MDL) 근처에서 두 달째 수상한 작업을 하는 것이 포착돼 군 당국이 해당 부대의 경계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14일 연합뉴스가 전함.
 - 정부의 한 관계자는 14일 "북한군이 서·중·동부전선의 MDL 근처에서 근접 정찰과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MDL 침범 등에 대비해 일선 경계부대의 경계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힘.
 - 북한군은 적계는 5명, 많게는 20명씩을 조를 이뤄 MDL 군사표식물(푯말)을 확인하고 쓰러진 표식물을 바로 세우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올해에는 북한군이 그간 귀순했던 일부 전선의 MDL 근처에서 대인 지뢰를 매설하는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짐.
- 북한, KN-01 단거리미사일 3발 동해로 발사(6/14, 연합뉴스)
 - 북한이 14일 오후 원산 인근 동해상으로 KN-01 단거리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뉴스에 따르면 군당국은 KN-01 단거리미사일이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정확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시험발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이 미사일은 100여km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한은 올해 들어 지난 2월 6일과 5월 9일에 이어 세 번째로 KN-01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뉴스는 덧붙임.

마. 남북 경제 관계

- 정부, 메르스 검역장비 北 반출…“오늘 설치 예정”(6/8,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검역용 열감지 카메라가 8일 북측 개성공단 출입사무소 등에 설치된다는 통일부 대변인의 인용 보도함.
 - 또 뉴스는 정부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지난 2일 요청한 메르스 검역장비인 열감지 카메라 3대를 지난 5일 북측에 지원했다고 전함.

- 개성공단에 북한판 초코파이 ‘경단설기’ 등장(6/8,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8일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의 기자간담회 말을 인용 북한의 노보물자(노동자를 보호하는 보너스의 의미)를 100% 북한 제품으로 써달라는 요구에 올해 3~4월부터 본격적으로 북한 제품이 납품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함.
 - 뉴스는 개성공단에 납품 물건으로 초코파이와 유사한 경단설기와 함께 닭고기 즉석국수, 일본산 조미료인 ‘아지노모토(味の素)’와 비슷한 ‘아지노리키(AJI-NO-RIKI)’ 등의 북한 제품이 있다고 전함.

- 개성공단 北근로자 ‘메르스 마스크’ 지급 결정(6/9, 6/11, 연합뉴스)
 -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9일 기업 책임자(법인장)회의를 갖고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에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방역을 위한 마스크를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또 뉴스는 11일 개성공단 기업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일부 기업들이 요구상황과 근로 조건 등에 맞춰 개별적으로 마스크를 지급했고 지급된 마스크 개수는 약 400개 수준으로, 일단은 일회성으로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함.

바. 남북 사회 관계

- 북한, 6·15공동선언 15주년 사진전람회(6/1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3일 6·15공동선언 발표 15주년 기념 사진전람회를 평양 인민문화

궁전에서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함.

- 전람회에는 지난 2000년 6월 1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과 순안공항에서 만나는 사진과 정상회담 사진도 나왔으며 개막식에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양건 노동당 비서,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김원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장이 개막사를 함.

- 北, '괴뢰패당은 6·15민족공동행사를 끝내 열 수 없게 만든 범죄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며 '날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現 북남관계는 나중에는 전쟁밖에 터질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뚜렷이 입증해준다'고 주장(6.8, 중앙통신·노동신문)
- 우리 정부의 '대화' 언급(실무접촉 제의·北의 대화거부 등)에 대해 '대화의 간판을 도용한 파렴치한 反北도발'이라며 "대화타령으로 여론을 오도할 것이 아니라 대결정책을 철폐함으로써 대화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再주장(6.9, 중앙통신·노동신문)
-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6.6, '北 핵무장포기·대화과 협력의 장으로 나올 것' 등)를 "동족에 대한 극단적인 거부감과 대결광기가 짙게 풍기는 가시돋힌 망발"이라고 지속 비난 및 '핵포기 不可' 강조(6.9, 중앙통신·노동신문)
- 남한의 6월 8일 현재 '메르스(중동호흡기성전염병)' 감염 환자 87명 등 확산 및 1,160여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휴업 등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MBC 방송 인용 보도(6.9, 중앙통신)
- 6월 민주항쟁 28주년 관련 '반미·반정부 투쟁의 정당성'을 강조 및 '남조선의 현실은 제2의 6월 인민항쟁과 반역정권 타도를 위한 전민항쟁을 요구하고 있다'며 反정부투쟁 선동(6.10, 중앙통신·노동신문)
- 우리 軍의 각종 규모와 내용의 군사훈련들 진행 관련 '북침 전쟁도발책동이 분별을 잃고 갈수록 극악무도해지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北) 군대와 인민의 정의의 대응 역시 강도 높게 벌어질 것'이라며 '그 어떤 도발도 용서치 않고 무자비하게 짓밟개버릴 것'이라고 위협(6.10, 평양방송)
- 북의 해외 근로자파견을 놓고 '노예노동과 자본착취' 주장 관련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혈투으며 인권모략에 열을 올리는 것은 실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개나발'이라며 '반공화국 인권모략에 기승을 부릴수록 파멸을 앞당기는 어리석은 망동으로 될 뿐'이라고 위협(6.13, 중앙통신·노동신문)
- 【「조평통」서기국 보도 제1096호(6.14)】 KBS의 '메르스 악성코드' 北 연계 가능성 보도 관련 '전염병 사태까지 동족대결에 악용해 보려는 또 하나의 극악한 반공화국 도발망동'이라며 '남조선이 오늘과 같이 죽음의 공포가 떠도는 수라장으로 된 것은 전적으로 박OO패당의 부패무능과 반인민적 통치가 가져온 필연적 결과'라고 비난(6.14, 중앙통신·중앙방송)
- '남조선괴뢰들의 대화와 압박 병행전략은 대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외세와 작당하여 우리 공화국을 정치군사적으로 압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이런 책동은 민심의 이목을 뒤편으로 돌려 최악의 전염병 사태로 초래된 집권위기를 모면하려는 비열한 흥계도 깔려 있다'고 비난(6.14, 중앙통신·노동신문)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북한 “인공위성 발사는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6/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2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대담에서 “인공지구위성 제작 및 발사국으로서 우리의 지위는 적대세력들이 부정한다고 해서 결코 달라지지 않으며 우주개발사업은 그 누가 반대한다고 해서 포기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함.
 -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인공위성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며 도전”이라고 주장함.
 - 대변인은 “우리의 평화적 성격의 위성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보다 우위에 있는 국제법에 의해 공인된 주권 국가의 당연한 자주적 권리”라며 유엔 구성원 중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 ‘시비질’을 하는 것은 대북 적대정책을 펴는 미국뿐이라고 지적함.

나. 주요 매체 논평

- 북한 “미국, 마음 편히 잘 수 없도록 하겠다”(6/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8일 논평을 통해 “평소 우리에게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던 해리스가 지역 사령관으로 취임한 것은 미국의 대조선 정책의 직접적 반영이 아닐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해리 해리스 제독이 미국의 신임 태평양사령관으로 부임한 것과 관련, 대북 적대정책을 펴는 미국이 ‘발편잠’(마음을 놓고 편안히 자는 잠)을 잘 수 없도록 하겠다고 위협함.
 - 통신은 “미국은 저들의 세계제패 전략을 실현하는 데서 우리 공화국을 최대의 적수로 보고 있다”며 “우리를 첫 번째 공격 목표로 삼고 의도적·체계적으로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함.
- 북한 “사이버 테러의 ‘원흉’ 미국 멸망시킬 것”(6/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9일 ‘사이버테러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글에서 미국이

지난 2010년 자국의 핵시설에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는 최근 외신 보도를 전하며 “미국이야말로 사이버 공간의 가장 악랄한 '파괴자'이자 사이버 테러의 '원흉'”이라고 비난함.

- 신문은 또 이번 사건으로 지난해 말 소니 픽처스 영화제작 보급사 해킹 사건 당시 북한으로 수사 방향을 정한 이유를 찾았다면서 “우리에게 사이버 테러를 단행한 원흉이라는 감투를 뒤집어씌우자는 것”이라고 주장함.
- 북한은 “빈말을 모르는 우리 군대의 지상과 해상, 수중과 공중, 사이버 공간의 모든 타격수단이 지금 목표물을 겨누고 격동상태에 있다”며 “우리는 미제가 원하고 택하는 어떤 형태의 전쟁, 작전, 전투에도 대응해줄 수 있다”고 역설함.

■ 북한 “미국의 FIFA 수사는 러시아 월드컵 방해 속심”(6/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일 ‘체육을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는 부당한 행위’란 글에서 미국 당국의 국제축구연맹(FIFA) 지도부 수사와 관련하여 “미국은 저들의 이익에 저촉되는 일은 다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고집하면서 전횡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함.
- 북한은 러시아 대통령의 입장 발표를 인용해 “국제축구연맹에 가해지고 있는 미국의 압력은 러시아에서 진행되는 2018년 월드컵 경기대회를 방해하려는 속심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분석가들은 미국이 반부패 의지를 가지고 수사에 나선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에 양갈음을 하려는 것이라고 평하고 있다”고 소개함.

■ 북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 비난…“강패적 망동”(6/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일 ‘정치망나니들은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모욕해 피소된 일본의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50)씨에 대해 ‘불망나니’(성질이나 행동이 지독히 못된 사람)라고 비난하면서 “반인륜적 죄악으로 얼룩진 과거 역사를 왜곡하고 남의 영토를 강탈하려고 날뛰는 일본 반동의 야망이 진하게 표현되고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최근 일본 정계에서 범죄적 역사를 한사코 부정하고 자위대 해외 파견을 제창하는 것과 같은 망언들이 튀어나오는 것은 일본이 보다 우경화됐으며 그의 재침이 시간문제라는 것을 여실히 입증해 주고 있다”고 강조하고, “일본의

재침은 결코 먼 앞날의 일이 아니다. 벌써 현실로 닥쳐왔다”며 “만일 일본이 재침의 총소리를 울린다면 전세대의 피값과 일본이 전체 조선민족을 괴롭히고 우롱한 죄값을 받아낼 기회가 될 것”이라고 경고함.

- 북한 “미국, '북 핵보유국' 공개 인정”(6/13, 노동신문, 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13일 '핵경쟁을 몰아오는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제목의 논설에서 '북한=핵무장국' 표현은 "미국이 우리 나라를 어쩔 수 없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함.
 -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이 지난달 발의한 국방수권법(S. 1376) 본문에는 미 국방부를 상대로 '세계 핵환경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됐는데 "북한은 핵무장국"이라고 적시한 바 있다고 연합뉴스가 덧붙임.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특이사항 없음.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특이사항 없음.

사. 대러시아

- 북한서 러시아 국경절 기념연회 열려…친선 강조(6/11, 조선중앙통신)
 -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는 11일 북한 고위 간부들을 초청해 러시아 국경절인 독립기념일(6.12)을 계기로 기념연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함.
 - 연회에서 로두철 내각 부총리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수령님들의 뜻을 이어 러시아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신다”며 북러 친선관계를 강화해나가는 것이 북한 정부의 기초임을 강조함.
 - 연회에는 로두철 부총리를 비롯해 박춘남 문화상, 리영철 노동당 부부장, 궁석웅 외무성 부상, 리광근 대외경제성 부상, 조선러시아친선의원단 위원장인 홍서현 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 등이 참석함.

- 북한 최고검찰소장 방러…사법협력 강화 가속화(6/13,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남한의 대검찰청격인 북한 최고검찰소 대표단이 러시아 방문을 위해 13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중앙통신은 대표단 단장이 장병규 최고검찰소장이라고 전했으나 구체적 방문 목적과 기간 등은 밝히지 않았으며 장 최고검찰소장은 방러 기간 러시아측과 불법 체류자 송환 문제 등 러시아에 나가있는 북한 노동자들에 관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덧붙임.

아. 국제기구

- 북한, 유엔 안보리에 미군 '탄저균 배달사고' 조사 요구(6/13, 연합뉴스)
 - 북한은 12일(현지시간) 최근 미국 군 연구소에서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로 배송된 살아있는 탄저균이 자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조사를 요구했다고 연합뉴스가 13일 전함.
 - 북한은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자성남 대사 명의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안보리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미국은 치명적인 대량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실제 전쟁에서 (북한에 대해) 사용할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힘.

- 지난 4일 자로 되어 있는 이 서한은 이어 “안보리가 살아 있는 탄저균 배송 문제를 상정해, 미국의 생물학전 계획을 철저히 조사하기 촉구한다”고 밝힘.

자. 기타 국가

- 네팔 북한병원 의료진, 환자 사망해 경찰서 대피 소동(6/11, 히말라안타임스)
 - 히말라안타임스는 9일(현지시간) 다마울리에 있는 북한이 운영하는 네-고려 병원(Ne-Koryo Hospital)에서 이달 초 자궁 종양 제거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었던 네팔 여성 기타 말라 타쿠리(43)가 사망했다고 10일 보도함.
 - 타쿠리의 유가족과 친척들은 의료진의 과실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고 김모 씨 등 수술에 참여한 북한인 의사 4명은 안전을 위해 인근 경찰서로 피했다고 신문은 덧붙임.
 - 신문은 김씨 등은 10일 병원과 유가족, 정부가 이 지역 보건책임자를 대표로 위원회를 구성해 타쿠리의 사망을 조사하기로 합의한 뒤에야 경찰서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보도함.
- 유엔 CTBTO, 북한에 핵실험금지조약 서명 촉구 예정(6/12,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가 오는 22일부터 북한 핵실험 탐지와 관련한 국제 토론회를 열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서명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은 CTBTO 대변인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12일 전함.
- “북한, 유엔 제재결의에도 앙골라에 군수물자 공급”(6/12, 워싱턴타임스)
 - 북한이 유엔의 금지에도 앙골라에 군수물자와 군 훈련 교관 등을 보내고 있다고 미국 워싱턴타임스가 아시아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11일(현지시간)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북한 작전국의 외화벌이 조직인 생필연합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초계정 18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엔진과 부품을 앙골라에 수출했다고 함.
 - 매체는 또 북한이 20여 년 동안 군사 교관이나 고문관들도 앙골라에 파견해 왔다고 말하고 교관들은 3월에 앙골라에 입국해 12월까지 대통령 경호부대에 머물며 경호원들에게 무술과 화기를 다루는 방법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전함.

- 【북과 남 그리스도교 단체들의 공동성명(6.8)】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관련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북과 남에는 극도의 불안한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며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합의를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6.8, 중앙통신·평양방송)
- 일본군 위안부 관련 ‘죄를 지었으면 응당히 잘못을 느끼고 사죄해야 한다’며 ‘과거청산만이 일본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주장(6.8, 중앙통신·노동신문)
- 미국의 한국·알래스카 등에 ‘사드’·요격미사일 등 배치 계획 및 이는 ‘이란과 北의 미사일공격에 자국본토와 동맹국들의 안전 담보 명분’을 “요격미사일방위체계 배비에 숨은 범죄적 기도”라며 ‘핵무기 배방 강화’ 강조(6.9, 중앙통신·민주조선)
- 日 경찰의「총련」의장 차남 등 기소(북한 송이 불법수입) 관련 ‘총련과 공화국의 대외적 영상을 깎아내리기 위한 너절하고 비열한 반공화국 모략소동’이라며 ‘일본은 부당하게 체포한 총련 일꾼들을 즉시 석방해야 하며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6.11, 중앙통신·민주조선)
- 美 ‘워싱턴포스트’의 보도내용(올해 매일 2명 이상의 주민들이 美 경찰의 총에 의해 사망)을 거론하며 ‘미국은 인권재판관이 아니라 인권피고석에 앉아 벌을 받아야 할 세계최대의 인권범죄국’이라고 비난(6.14, 중앙통신·민주조선)
- 北 외무성 대변인, 6월 12일 중통 문답에서 “우리(北)의 위성발사는 주권국가의 당연한 자주적 권리”라고 ‘미국의 탄도탄 기술을 이용한 모든 위성발사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 제기’ 반발 및 ‘위성발사 강행’ 시사(6.12, 중앙통신·중앙방송)
- 미국의 ‘북핵 6자회담 재개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다’는 표명에 대해 “추악한 권모술수”로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철저히 알아먹고 정세를 격화시킨 장본인’이라고 책임 전가(6.12, 중앙통신 논평)

3. 대내정치

가. 김정은 동향

- 북한 김정은, 한국전쟁 사적지 원공 현장 시찰(6/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9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새로 건설·복구된 한국전쟁 조국해방전쟁 사적지를 시찰했다고 보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혁명사적관에 대해 큰 만족감을 표시하며 관련 간부와 과학자들의 공로를 거듭 치하하고 이어 김일성 주석이 한국전쟁을 ‘승리’로 이끈 비결은 “결코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누구도 지닐 수 없는 탁월하고 특출한 영도적, 천리혜안의 지략과 고매한 덕성을 지녔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정신을 깊이 간직해야 한다고 주문함.

- 이번 시찰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리제일 당 제1부부장이 수행함.

■ 김정은, 국경절 맞아 푸틴에 축전…“관계 확대발전”(6/1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제1위원장은 러시아의 국경절인 독립기념일(6.12)을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에서 “러시아연방 국경절에 즈음해 당신과 당신을 통해 귀국 인민에게 따뜻한 축하와 인사를 보낸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함.
- 이어 통신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조러 친선관계가 새 세기에 들어와 최고위급에서 채택된 공동문건들의 정신에 맞게 훌륭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고 보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또 “친선의 해인 올해에 쌍무관계가 보다 높은 단계로 확대발전되리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하고 “대통령 영도 아래 귀국에서 사회정치생활과 경제, 국방의 모든 영역에서 성과와 진보가 이룩되고 나라의 존엄과 이익이 수호되고 있다”며 “당신이 건강할 것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고 통신은 전함.

■ “김정은 9월 러시아 극동방문…푸틴과 회동 가능성”(6/12, 중국청년보)

- 중국청년보(中國青年報)는 12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오는 9월 초 러시아 극동지역을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함.
- 크렘린궁의 소식통은 “푸틴 대통령이 9월 초 하바롭스크에서 열리는 소련군 출병 및 중국·북한의 항일전쟁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 뒤 베이징(北京)으로 이동,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기념행사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힘.
- 이 소식통은 이어 “푸틴 대통령이 하바롭스크에 머무는 기간에 북한의 원수(정상)도 초청받아 제88여단(김일성 전 북한 주석이 참전했던 부대) 기념비 제막행사에 참석할 것”이라면서 “푸틴 대통령이 이 기간에 북한 지도자(김정은)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함.

- **김정은, 중국 유람선 침몰사고에 애도 메시지(6/12, 인민일보)**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양쯔(揚子)강 유람선 침몰사고를 겪은 중국 측에 애도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중국 인민일보(人民日報)가 12일 보도함.
 - 신문은 김 제1위원장이 위로 메시지를 누구에게 보냈는지,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유람선 ‘동광즈싱’(東方之星) 침몰 사고와 관련,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強) 총리에게 각종 방식으로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한 각국 지도자 중 하나로 김정은 북한 제1위원장의 이름을 거론함.

- **북한 관리 “김정은 매우 바빠”...9월 방중 어려울 듯(6/12, dpa통신)**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9월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2차대전 승리 기념행사 초청에 김 제1위원장이 응할지에 대한 dpa기자의 질문에 “존경하는 원수님은 매우 바쁘다”고 답한 내용을 dpa통신이 12일 보도함.
 - 이 관계자는 김 제1위원장이 오는 8월 광복절과 10월10일 조선노동당 창건일 행사를 앞두고 준비할 일이 많다고 설명하고 북중관계에 대해서는 “그다지 좋지 않다”고 말한 내용을 통신은 전함.

- **북한 김정은, 고사포병군관학교 시찰(6/13,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고사포병군관(장교)학교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사적비, 양어장, 버섯재배장 등 교내 여러 시설을 둘러보고 운영 상황과 학교 주변 산림조성 상태 등에 대해 "당정책관철을 위해 얼마나 머리를 쓰고 아글타글 노력하고있는가를 잘 보여준다"며 모범적이라고 치하함.
 - 이날 시찰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박정천 부총참모장이 수행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김정은, 중러 등거리 외교주장 노동당간부 처형”(6/10, 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관측이 나돌았던 올봄 중국과

러시아와의 등거리 외교를 진언했던 한 북한 노동당 간부가 ‘최고 지도자에 대한 반역’을 이유로 처형됐다고 마키노 요시히로(牧野愛博) 미국 존스홉킨스대 고등국제문제연구대학원 객원연구원이 문예춘추 7월호 기고문에서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북한 의사 6명, 리비아서 금 밀반출하려다 체포”(6/12,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2일 리비아 인접 국가인 튀니지에서 발행되는 ‘알 마그레브’ 신문이 지난 8일 “리비아를 출국하려던 북한인 6명이 5월 중순 금 2kg을 밀반출하려다 체포됐다”고 보도했다고 전함.
 - 보도에 따르면 체포된 북한인들은 몇년간 의료 활동을 마치고 리비아를 출국하려던 북한 의사들이며 이들은 세관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북한대사관의 지시를 받아 금과 현금을 밀반출하려했음을 시인했다고 매체는 전함.
 - 리비아 세관 당국은 이들의 가방을 검색한 결과 다량의 의약품도 적발했으며 체포된 북한 사람들은 약품의 합법적 구입 여부를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짐.

다. 공식 행사

- 북한, 내달 19일 김정은 체제 첫 지방의회 대의원선거(6/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인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39조와 지방인민위원회들의 결정에 따라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7월 19일 실시된다”고 밝힘.
- 북한, 지방의회 대의원선거 앞두고 중앙선거지도위 조직(6/14, 노동신문)
 - 북한이 다음 달 19일 전국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지도위원회를 조직했다고 14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전함.
 - 중앙선거지도위원회 위원장은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부위원장은 김평해 노동당 비서, 서기장은 홍선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이 각각 맡음.
 - 위원으로는 현상주 직업총동맹 중앙위원장, 김정순 여성동맹 중앙위원장, 리명길 전국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장, 전용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장, 김영호 전 내각 사무국장 등이 임명됐다고 신문은 전함.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북한, 전 주민에 당정책 집행 촉구...“인민군 따라배워라”(6/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일 1면 사설에서 “구태의연한 사고관점과 일본새를 가지고서는 오늘의 시대에 따라설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모든 사업을 인민군대 식으로 벌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전 사회가 인민군을 본받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함.
 - 신문은 “인민군대에서는 당정책을 놓고 시기성을 논하면서 흥정하는 현상, 이런저런 구실을 대며 시급히 집행에 착수하지 않거나 중도반단하는 현상, 위에 밀고 아래에 밀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현상”이 있을 수 없다며 사회 전반의 문제를 짚음.
 - 또 간부들을 상대로 “전기문제, 물문제, 설비문제요 뭐요 하면서 생산을 정상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녀두리는 추호도 허용될 수 없다”며 “앉아서 조건타발, 우는 소리나 하는 패배주의 한숨소리, 보신주의” 등에 종지부를 찍으라고 주문함.
 - 신문은 최근 김정은 제1위원장이 ‘격노’했던 자라공장 시찰 사건을 상기하며 청천강계단식발전소, 세포지구 축산기지 등 주요 건설사업을 “당에서 정해진 시간까지 무조건 끝내기 위한 총돌격전을 과감히 벌려나가야 한다”고 요구함.
- 북한, 각국 가뭄 대책 소개하며 극복노력 독려(6/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심각한 가뭄피해, 그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세계 도처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자주 나타나 경제 전반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특히 각국의 가뭄 피해가 심각하다고 소개함.

- 신문은 브라질, 이란, 마다가스카르의 가뭄 피해를 소개한 뒤 “여러 나라들에서 후과를 극력 줄이기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취해지고 있다”고 설명함.
- 신문은 이어 쿠바의 물 절약 투쟁과 물 소비량 통제 노력, 스리랑카의 우물 건설을 합당한 대책으로 소개하고 러시아도 농업에 ‘물기흡수제’를 도입해 물을 절약하면서 소출을 20~70%나 높였다고 전하면서 이밖에도 각국이 새 물 보존방법 도입, 물 원천 발굴 사업, 가물건달성(내한성) 강한 품종 심기 등 일련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주민들의 극복 노력을 독려함.

- 서평양기관차대 창립(‘55.6.9) 60주년 기념보고회, 6월 9일 진행(6.9, 중앙통신·중앙방송)
- 철도성 대표단(단장 : 전길수 철도상), 6월 9일 몽골(국제철도협력기구 제43차 장관회의 참가)에서 귀환(6.9, 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일본조선인 과학기술협회 오사카지부 대표단, 6월 9일 만경대 방문(6.9,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의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방문 1주년 기념보고회, 6월 9일 진행 및 김수길(평양시당 책임 비서) 등 참가(6.10, 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6월 10일 ‘한춘익’(비전향장기수)의 90회 생일상 전달(6.10, 중앙통신)
- 전체 일꾼들과 당원들 및 근로자들에게 ‘인민군대의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 배워 대비약적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당 창건 70돌에 노력적 선물들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으로 뚝뚝이 들어가자’고 호소(6.10, 중앙통신·노동신문)
- 조일민「반제민전」평양지부 대표와 지부성원들, 6월 11일 6·15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을 즈음하여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참관(6.11, 중앙통신)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6월 1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주북 라오스 대사(폰캄 인타부아리) 신임장 접수 및 담화(6.11, 중앙통신·중앙방송)
- 최룡해(당중앙위 비서), 6월 1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시리아 농민총동맹대표단(단장 : 하마드 압부드 알 사우드 위원장)과 담화 및 김정은 선물 접수(6.11, 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들(단장 : 오병우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교장, 전진성 규슈조선중고급학교교장), 6월 11일 평양 출발(6.11,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해방산호텔 일꾼-종업원들(“금수산태양궁전을 최고성지로 꾸리는데 이바지”)에게 ‘감사’ 전달(6.12, 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가 강원도 원산육아원과 애육원에 보낸 선물 전달모임, 6월 13일 현지에서 각각 진행(6.13,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해군부대들에 실전배비되는 신형 반함선로켓 발사훈련 참관(6.15,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제2차 군단예술선전대 경연에 당선된 예술선전대들의 공연 관람(6.15,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일 ‘당 사업 시작’(6.19) 51주년을 즈음한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집회, 6월 14일 청진항에서 진행하고 김정은에게 보내는 편지 채택(6.14, 중앙통신·중앙방송)

4.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 남한 전력생산능력 북한의 12배...격차 사상 최대(6/8, 연합뉴스)
 - 8일 통계청 및 발전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남한의 발전설비 총 용량은 8만6천969메가와트(MW)로 북한(7천243MW)의 12배 수준으로 집계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북한 “최악 가뭄 속 전국 논 80% 모내기 성과”(6/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8일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 지원자들이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모내기전투를 펼쳐 현재까지 80% 이상의 면적에 모내기를 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보도함.
 - 신문은 황해남도 농촌경리위원회는 물이 부족한 조건에서도 90% 이상의 논 면적에 모내기를 마쳤으며 벼 영양단지 모재배와 물절약형 농법을 소개하고

함경북도 길주군은 저수지의 물 확보를 위한 간선 물길 확장과 하천보 막이공사, 우물과기를 통해 물 원천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 모든 역량을 집중해 모내기를 적기에 마무리했다고 강조함.

- 신문은 또 황해남도 연안군과 남포시 등 가뭄 극복 사례와 함께 혁신적인 물관리 방법을 소개하며 모내기 성과를 높일 것을 독려함.

라. 대외 경제 관계

- 북미, 4월 교역 38배 급증…대부분 인도적 지원(6/9, 미국의소리)
 -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 북한과 미국의 교역액이 26만7천달러로 3월의 7천달러에 비해 38배 늘었다고 밝힌 내용을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 전함.
 - 매체는 북미 교역량이 지난 1월 14만7천 달러를 기록한 후 계속 감소세를 보였다가 4월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북한과 미국의 교역액은 47만7천달러로 이 가운데 인도적 지원을 위한 품목이 40만5천달러로 전체의 84.9%를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닭·오리 등 가금류 5만6천달러, 설탕 1만6천만달러 등이었다고 전함.
- “몽골 진출 북한 노동자들 강제노동에 시달려”<ILO>(6/10, 미국의소리)
 - 유엔 국제노동기구(ILO)가 몽골 정부에 현지 북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0일 소피 피서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홍보담당관의 말을 인용하여 전함.
 - 소피 피서 담당관은 “몽골의 소규모 직물공장과 건설 현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모습을 봤는데 이들은 정상적 노동시장에 훨씬 못 미치는 조건 아래 강제 고용돼 있었다”고 지적하고, “몽골 당국에 현지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바로잡아 줄 것을 여러 차례 권고했다”고 밝힘.
 - 또 그는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감시인들에게 상납하고 있었고 작업장을 떠나지도 못하는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증언하면서 “몽골이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 협약 29조를 비준한 만큼 자국 내에서 그런 일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함.

- 독일, 북한 구호사업에 10억 지원(6/11, 미국의소리)
 - 독일이 올해 국제 민간단체의 북한 구호사업에 91만 달러(10억여원)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1일 전함.

- “북한, 외국인에 백두산 마라톤 관광 허용”(6/11,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1일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북한 전문 고려여행사가 백두산 하프 마라톤을 포함한 새 관광상품을 출시했다고 전하면서 최근 백두산 관광지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 북한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백두산 하프 마라톤’ 관광을 처음으로 허용했다고 전함.
 - 이번 관광상품에 대하여 매체는 오는 8월 18~22일 4박5일 간 진행되며 관광객들은 평양에서 먼저 2박을 하며 시내 관광을 한 뒤 항공편으로 백두산으로 이동해 천지와 이명수 폭포, 항일유적지인 백두산지구 비밀기지 등을 둘러보고 이어 관광 나흘째인 21일 백두산 일대에서 하프 마라톤을 할 예정이라고 전함.

- 유럽연합, 북한 유기농법 전수에 5억여원 지원(6/12, 미국의소리)
 - 유럽연합(EU)이 북한에서 진행중인 민간단체의 유기농법 전수사업에 미화 51만달러(5억6천여만원)를 지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2일 보도함.
 - EU 웹사이트 등에 따르면 원조개발협력청은 지난해 12월 국제유기농업운동 연맹(IFOAM)의 ‘북한 유기농법 전수사업’에 51만 달러를 지원함.

- 북·중 연결 신두만강대교 건설 70% 이상 진행(6/12, 연변일보)
 - 북한과 중국 간 새로운 경제교류 국경다리인 신두만강대교 건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연변일보는 보도함.
 - 12일 연변일보(延邊日報)는 정식 명칭 ‘중조(中朝) 변경 취안허통상구 대교’인 다리가 공사비 1억6천800만 위안(약 300억 원)을 들여 연내 개통된다고 전하고 “새 다리가 완공되면 늘어나는 통행량을 감당하고 물류운수 원가를 낮춰 훈춘의 투자여건 개선 및 외국자본 유치를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보도함.

- 독일 구호단체, 북한서 채소종자 생산사업(6/13, 미국의소리)
 - 독일의 민간구호단체가 북한에서 새로운 채소종자 생산 사업을 시작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3일 전함.
 - 독일 민간 구호단체 세계기아원조는 11일(현지시간) “지난 3월 북한에서 새로운 채소종자 생산 사업을 시작했고 2018년 3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필요한 예산은 유럽연합으로부터 지원받았다”고 밝힘.
 - 이번 종자생산 사업은 북한의 식량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평안도와 황해도 등 북한 내 5개 도에서 배추, 토마토, 고추 등의 채소종자 10종을 생산해 다른 지역에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방송은 전함.

- 평안북도 간석지건설자들의 ‘20만산 대발파 성과적 진행’ 및 평안남도 평원군 일꾼들의 ‘6월 8일 현채 모내기 80% 계선’ 등 보도(6.9, 중앙방송)
- 천내지구 탄광연합기업소 문천탄광, 석탄생산에 주력(6.11, 중앙방송)
- 국가과학원 과학자들의 ‘석탄증산 기여 연구 성과(관성식 적재운반설비 성능개선으로 탄채취를 20-30% 증가 등)’ 선전(6.12, 중앙통신)
- 백두산선군청년2호발전소, 군민협동작전에 의하여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다고 소개(6.13, 중앙통신)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휴먼라이츠워치 “북한, 개인 상업활동 극도로 탄압”(6/9,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9일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HRW)가 북한에서 개인 상업 활동이 활발했던 지난 2013년 이후 탈북자 12명을 면담한 결과 북한 정부가 최근 주민들의 개인적인 상업 활동을 극도로 탄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함.

- 이 단체는 “상업 활동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의 운명은 뇌물을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연출 동원 능력, 북한 정부의 노동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며 “때문에 북한 상인들은 당국자에게 뇌물로 바칠 돈이나 담배를 항상 지니고 다닌다”고 비판했다고 매체는 전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中변방부대, 북중접경지역서 탈북자 추정 한명 사살(6/11, 연합뉴스)
 -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지린(吉林)성 연변(延邊)자치주 허룽(和龍)시는 11일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오늘 (오전) 3시 55분(현지시간)께 불법월경자(탈북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허룽시 난핑(南坪)촌 지디둔(吉地屯)에서 체포를 거부하다 주둔군에 의해 사살됐다”고 밝힌 내용을 연합뉴스가 전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 ‘저출산’ 북한, 세쌍둥이에 남다른 애정(6/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8일 ‘세쌍둥이 가정의 예사로운 하루’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평양시 낙랑구역에 사는 한 세쌍둥이 가정의 생활을 소개함.
 - 신문은 이후 지역 인민위원회 소속 간부들이 벽지를 발라주고 세탁기와 옷걸이에 이르기까지 “생활의 구석구석마다 다심히 살펴주었다”고 전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길 날이 없어 이렇게 매일같이 명절처럼 흥성인다고 세쌍둥이 어머니는 눈물이 글썽하여 말했다”면서 이런 날은 “예사로운 날들

중의 하루”라고 밝혀 세쌍둥이에 대한 주변의 관심과 애정이 각별한 사회 분위기를 전함.

- 앞서 신문은 지난 4월 평안남도 맹산군의 세쌍둥이 군관의 결혼을 지역의 당 책임간부가 성사해 준 일화를 소개함.

■ 평양에 남한 말투와 노래 “인기 있네”(6/9,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9일 북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최근 평양을 중심으로 주민들 사이에 남한 말투와 노래가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며 남한 말투와 노래가 퍼지는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함.
- 평양 젊은이들은 집에서 남한 트로트 ‘내 나이가 어때서’를 몰래 들으며, 전에는 ‘당장 끄라’ 하고 제지하던 어른들도 함께 듣는 분위기라고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매체는 전함.
- 또 매체는 서너 살짜리 어린이들도 “너 몇 살이니” 하고 물으면 “거기는요”라고 남한 투로 대답하고 심지어 남한 말투를 단속해야 할 보안요원들도 마주친 주민이 가끔 “파이팅”이라고 외치면 “파이팅”이라고 따라 외치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 암암리에 남한 문화에 빠져들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소식통들의 주장을 전함.

■ 평양 부유층 커피 마시기 유행 “멋있어 보여서”(6/10, 신화망)

- 10일 중국 관영 신화망(新華網)은 북한에서 중산계층의 수입이 늘면서 수년 전부터 평양에 네일숍(손톱관리업소), 카페 등이 등장했다고 전함.
- 북한 주민 안모(63)씨는 신화망과 인터뷰에서 “돈을 번 사람들에게는 예전과 다른 소비 방식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면 자동차, 안마, 복권, 애완동물 등에 대한 관심”이라고 말하고 또 탈북자(선박회사 근무자 출신) 최성민씨는 “멋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커피 마시기가 작년부터 북한 부유층에서 유행했다”며 “돈 있는 사람과 대학생 등 젊은층에게 카페는 사람 만나는 장소로 환영받고 있다”고 말함.
- 신화망은 “소비에 대한 욕구가 평양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까지 확산 중이며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 열차역 등에 커피숍이 적잖이 생겼으며 금은보석을 소지하는 것이 신분·지위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전하고 “북한 인구 2천500만 명 가운데 10분의 1 정도가 이미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영공장이 일상생활용품의 종류를 늘려 배급하고 생필품이 아닌 종류를 생산해 주민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다“고 보도함.

- 사이버공격 받은 북한 주요 사이트들 또다시 ‘먹통’(6/1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2일 중국에 서버를 둔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김일성방송대학 웹사이트 우리민족강당, 대외용 웹사이트 류경·조선의오늘 등 주요 웹사이트 접속을 지난 3일 오후 6시께부터 시도했으나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함.
 - 다만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관영통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의 공식 도메인 (.kp)을 사용하는 웹사이트와 조선신보, 민족통신 등 친북매체 웹사이트는 접속이 원활한 상태라고 연합뉴스는 전함.

- “평양 고려호텔서 화재…인명피해 알려지지 않아”(6/12, AP통신, 미국의 소리, 로이터통신)
 - AP통신 등 외신들은 12일 목격자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주로 머무는 평양 고려호텔에서 11일 오후 5시30분께 불이 났다고 전하고 화재에 대한 당국의 공식적인 확인은 없었고 인명피해 등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도함.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화재는 11일 오후 5시30분께 호텔 36층 복도에서 발생했다”며 “불길이 심하지 않아 투숙객과 직원에 대한 대피령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함.
 - 로이터 통신은 화재 영상을 확보했다면서 영상에는 호텔의 두 건물 43층을 잇는 브리지에서 검은 연기기둥들이 피어오르는 장면이 담겨 있다고 보도하고 익명을 요구한 목격자의 말을 인용 화재현장에 경찰, 병력, 보안관리, 응급차 등이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다고 전함.
 - 이 목격자는 “화재현장을 촬영하려던 일부 외국인들이 (당국에) 체포됐다”고 덧붙였다. 화재가 11일 오후 6시15분께 발생했으며 오후 11시45분께 이르러서는 검은 연기기둥 하나만 보였다고 말하고 호텔을 황급히 빠져나오는 북한인들이 호텔 내부가 여전히 불에 타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함.

- 북한, 고려호텔 화재 후 외국인 모바일 인터넷 중단(6/13, 로이터통신)
 - 북한에서 평양 고려호텔 화재 직후 외국인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 3세대(3G)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 전함.

- 북한의 휴대전화 회사인 고려링크는 12일 오후 외국인 고객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인터넷 제공자의 서비스 중단 때문에 더이상 3G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면서 “복구가 되는 대로 서비스를 재개하겠다”고 밝힘.

■ “메르스 유입 막아라”... 북한, 국가비상방역위원회 가동(6/14,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4일 “조선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들이 취해지고 있다”고 전함.
- 조선신보에 따르면 최근 북한은 성·중앙기관 관계자로 국가비상방역위원회를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으며 이 위원회는 메르스와 관련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바탕으로 각 도, 시, 군 비상방역지휘부에 사전예방대책 강구 등 지침을 내리면서 매주 두 차례 이상 회의를 열고 있음.
- 각 지역 보건기관과 의사들은 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검병(검역)을 진행 중이며, 평양국제비행장과 국경지역 검사검역소에는 검역 설비를 늘리는 등 위생·동물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함.

- 조선소년단 창립 69주년 전국 소년과학 환상문예작품 및 모형전시회, 6월 5일부터 8일까지 평양에서 진행(6.8, 중앙통신)
- 제52차 전국 청소년체육학교 체육경기대회 폐막식, 6월 8일 평안남도 문덕군 체육관에서 진행(6.8, 중앙통신·중앙방송)
- 기상수문국, ‘지난 1년간 과학화·현대화·정문화 사업을 추진하여 기상수문·해양예보의 정확성 보장에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선전(6.8, 중앙통신)
- 北 박정주 선수, ‘2015년 세계청년역도선수권대회’(폴란드)에서 금메달 3개 획득(6.8, 중앙통신·중앙방송)
- 원산 육아원·애육원, 6월 8일 ‘김정은 현지 지시 관철’ 종업원 퀘기모임 각각 진행(6.9, 중앙방송)
- 축구훈련과 경기전 준비운동 위한 “축구운동체조(27가지 동작 맨손 운동체조·32가지 동작 운동지면공다루기 등) 창작 보급(6.9, 중앙통신)
- 김정일 저작(‘95.6.19,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 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 연구·체득 위한 중앙연구토론회, 6월 11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6.11, 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조선팀은 16일 평양에서 우즈베키스탄과 아시아지역 예선 2단계 경기의 두번째 경기를 진행한다”고 보도함.(6.12, 조선중앙통신)

©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미국 국무부, 북한에 ‘핵무기 포기’ 거듭 촉구(6/11,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은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에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러한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음.
 - 앞서 미국 국무부는 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의 추가 미신고 핵시설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보고서는 또 북한의 지속적인 핵 활동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임을 지적했음.
 - 대변인실 관계자는 “보고서에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가 잘 드러나 있다”며, “미국은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하도록 이끌기 위해 신뢰할만한 협상을 추진하겠지만,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도발을 자제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역설했음.

나. 미·북 관계

- 북미, 4월 교역 38배 급증…대부분 인도적 지원(6/9, 연합뉴스)
 -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 북한과 미국의 교역액이 26만 7천달러로 3월에 비해 38배 늘었으며, 교역 내용을 보면 미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실적은 전혀 없고, 전액 북한으로 수출한 것이라고 밝힘.
 - 통계상 수출로 잡혔지만 전부 민간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인도적 지원 품목이며, 북미 교역량은 지난 1월 14만7천 달러를 기록한 후 계속 감소세를 보였다가 4월에 증가세로 돌아섰음.
 -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북한과 미국의 교역액은 47만7천달러로 이 가운데 인도적 지원을 위한 품목이 40만5천달러로 전체의 84.9%를 차지함.

- 북한, “미국의 FIFA 수사는 러시아 월드컵 방해 속심”(6/10, 연합뉴스)
 - 북한은 미국 당국의 FIFA 지도부 수사가 오는 2018년 러시아에서 열리는 월드컵 을 방해하려는 부당한 행위라고 비난함.
 - 북한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미국은 뇌물행위가 미국은행을 통해 진행되었기 때문에 자국법에 따라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국제관례상 국제기구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함.
 - 이어 미국이 “러시아의 월드컵 경기대회 주최를 파탄시켜 대외적 영상을 깎아내 리고 저들이 당한 망신을 만회해 보자는 것”이라면서 “미국의 행위는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강한 반발을 자아냈다”고 전했다.
 - 북한은 또한 러시아 대통령의 입장 발표를 인용해 “2018년 월드컵 경기대회를 방해하려는 속심”이라며, “분석가들은 미국이 반부패 의지를 가지고 수사에 나선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에 양갈음을 하려는 것이라고 평하고 있다”고 주장함.

- 美 태평양사령관, “거만한 지도자가 북한 이끌어”(6/10, 연합뉴스)
 - 해리 해리스 신임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를 방문해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희생된 장병들을 추모한 직후 북한을 ‘불량국가(rogue state)’로 강도 높게 비판하며, “북한은 위험하고 예측불가능하며 거만한(arrogant) 지도자가 이끌고 있다”고 비난함.
 - 해리스 사령관은 천안함은 북한에 의해 격침됐으며,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북한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미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맞서 경각심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을 지키려는 의지를 지속할 것”이라고 다짐함.

- 북한, 유엔 안보리에 미군 ‘탄저균 배달사고’ 조사 요구(6/13, 연합뉴스)
 - 북한은 최근 미국 군 연구소에서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로 배송된 살아있는 탄저균이 자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조사를 요구했음.
 - 북한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안보리 앞으로 보낸 서한에 “미국은 치명적인 대량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실제 전쟁에서 (북한에 대해)

사용할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음.

- 북한은 이어 오산 미군기지 탄저균 반입을 맹비난하는 지난 3일 자 북한 국방위원회의 성명을 이 서한에 첨부했으며, 북한의 이 같은 반응에 미 제프 래스키 미 국무부 공보국장은 “반응할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음.

■ 북한, “미국, ‘북 핵보유국’ 공개 인정”(6/13, 연합뉴스)

-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핵경쟁을 몰아오는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제목의 논설에서 ‘북한=핵무장국’ 표현은 “미국이 우리 나라를 어쩔 수 없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 신문은 “그 누가 인정하든 안하든 우리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수도 달라질수도 없는 엄연한 현실”이며 “이 지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굳건해지고 확고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북한은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가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 미국 등을 향해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위협의 상호 감축을 전제로 한 ‘핵군축 회담’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6자회담은 최근 북한을 제외한 5개 국 수석대표의 연쇄 회동에도 불과하고 당분간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다. 중·북 관계

■ 中변방부대, 북중접경지역서 탈북자 추정 한명 사살(6/11, 연합뉴스)

- 중국언론들에 따르면 지린성 옌벤자치주 허룽시는 이날 웨이보를 통해 “오늘 (오전) 3시 55분께 탈북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허룽시 난핑촌 지디둔에서 체포를 거부하다 주둔군에 의해 사살됐다”고 밝혔음.
- 허룽시는 최근 북한군 탈영병에 의한 중국인 민간인 살인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경계가 대폭 강화된 지역으로, 지난해 12월 말 이곳에서는 북한 탈영병 한 명이 강도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총을 쏘 주민 4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고 같은 해 9월에도 20대 북한 남성이 중국인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바 있음.
- 그러나 사살된 사람이 탈영한 북한군 병사인지 일반 탈북자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허룽시는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 김정은 제1위원장, 중국 유람선 침몰사고에 애도 메시지(6/12, 연합뉴스)
 - 중국 인민일보 신문은 유람선 ‘동광즈싱(東方之星)’ 침몰사고와 관련,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에게 각종 방식으로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한 각국 지도자 중 하나로 김정은 북한 제1위원장의 이름을 거론했음.
 - 신문은 그러나 김 제1위원장이 위로 메시지를 누구에게 보냈는지,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관례로 볼 때 그는 북한 노동당 제1비서 자격으로,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겸하는 시진핑 주석에게 위로전을 보내 애도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으로 추정됨.
 - 이를 두고 현재의 다소 냉랭한 북중 관계와 관련해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지만 북한이 아직은 관계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라. 일·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러·북 관계

- 김정은 제1위원장, 국경절 맞아 푸틴에 축전…“관계 확대발전”(6/12, 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날 러시아의 국경절인 독립기념일을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축전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조려 친선관계가 새 세기에 들어와 최고위급에서 채택된 공동문건들의 정신에 맞게 훌륭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친선의 해인 올해에 쌍무관계가 보다 높은 단계로 확대발전되리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전날에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가 북한 고위 간부들을 초청 해 국경절 기념연회를 열었음.
- 김정은 제1위원장, 9월 러시아 극동방문…푸틴과 회동 가능성(6/12, 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오는 9월 초 러시아 극동지역을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중국청년보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음.
 - 크렘린궁의 소식통은 “푸틴 대통령이 9월 초 하바롭스크에서 열리는 소련군 출병 및 중국·북한의 항일전쟁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하며, 이 기간에 북한의 원수도 초청받아 제88여단(김일성 전 북한 주석이 참전했던 부대) 기념비 제막행사에 참석할 것”이라면서 “푸틴 대통령이 이 기간에 북한 지도자(김정은)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음.
 - 러시아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를 중시하는 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있다”면서 “평양이 베이징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동반자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 북한 관리, “김정은 제1위원장 매우 바빠”…9월 방중 어려울 듯(6/12, 연합뉴스)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2차대전 승리 기념행사 초청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응할지에 대한 DPA기자의 질문에 “존경하는 원수님은 매우 바쁘다”며, 김 제1위원장이 오는 8월 광복절과 10월10일 조선노동당 창건일 행사를 앞두고 준비할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 또 북중관계에 대해서는 “그다지 좋지 않다”고 말했으며, 조선노동당 관계자가 북중관계에 관해 언급한 것은 이례적임.
 - 앞서 중국 정부는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파시즘 전쟁 승리 70주년(제2차대전) 기념식에 김 제1위원장을 초청했다고 지난 4월 확인했지만, 방문 성사 여부를 둘러싸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음.
 - 일부 전문가는 김 제1위원장이 북핵 문제를 논의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려고 중국을 방문하지 않을 핑계를 억지로 찾고 있다고 진단했음.
- 북한 최고검찰소장 방러…사법협력 강화 가속화(6/13,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남한의 대검찰청격인 북한 최고검찰소 대표단이 러시아 방문을

- 위해 이날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으며, 대표단 단장이 장병규 최고검찰소장이라고 전했으나 구체적 방문 목적과 기간 등은 밝히지 않았음.
-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부터 상대방 국가에 있는 불법체류자를 서로 송환하는 내용의 협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장 최고검찰소장은 방러 기간 러시아측과 불법 체류자 송환 문제 등 러시아에 나가있는 북한 노동자들에 관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임.

바. 기타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박근혜 대통령, 美 태평양사령관 접견...대북·통일정책 논의(6/9,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한미군 초도순시차 방문한 해리 해리스 미국 신임 태평양 사령관을 접견해 우리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은 단호히 응징하되 민간 차원의 교류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 노력은 지속한다는 입장임.
 - 박 대통령이 미국 태평양 사령관을 접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날 접견에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테런스 오샤너시 미 7공군사령관, 버나드 샴포우 미 8군사령관 등이 참석했음.
- 박근혜 대통령, “국민안전 우선”에 방미 연기(6/10, 연합뉴스)
 - 박 대통령은 당초 16일(현지시간) 취임 이후 네번째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메르스 사태 대응 등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 하에 일정을 연기했음.

- 특히 이번 방미가 북한의 도발위협 대응 등 한반도 정세 관리와 한미동맹 공고화 등 우리 국익과 밀접하게 연관돼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박 대통령은 고심 끝에 방미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관측됨.
 - 청와대 김성우 수석은 “박 대통령은 미국 방문이 연기됐다고 해도 미국 측과 이번 방문의 주요 안건인 한반도 정세 관리 및 동북아 외교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경제협력과 한미간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으며,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미국 측과 조율을 거쳐 “양국이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방미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음.
 - 백악관은 이에 “박 대통령이 앞으로 서로 편한 시기에 방미하기를 기대한다”며, “양국 동반자 관계의 한 사례로서, 미국은 한국의 메르스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오바마 대통령, “朴대통령 결정 이해·지지…가장 빠른 방미 추진”(6/12,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연기 결정과 관련, “박 대통령께서 메르스 대응에 전념하기 위해 방미를 연기하기로 한 결정을 충분히 이해하며 이와 관련된 박 대통령의 판단과 리더십을 지지한다”고 밝혔음.
 -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메르스 발발에 따른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어려운 시기에 한국이 도전을 조속히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음.
 -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양측이 가장 빠른 시기에 방미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 측 과 필요한 협의를 하도록 참모들에게 지시해줬다”고 밝혔음.
 - 청와대는 양측 정상에 이날 기후변화 대응문제와, 북한 문제와 원자력 협정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양국 공동 관심사에 대해 긴밀한 협력방안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음.
- 윤병세 외교부장관 방미, 원자력협정 서명…대통령 방미시기 논의(6/14,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4~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과 워싱턴D.C.를 잇따라 방문 한다고 외교부가 밝혔음.
 - 윤 장관은 15일 워싱턴D.C. 미 에너지부에서 어니스트 모니즈 미 에너지부 장관과 가서명 상태인 한미원자력협정에 정식 서명할 예정임.
 - 윤 장관과 케리 장관과의 회동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케리 장관과의 면담은

- 부상 회복 정도와 근무 가능 여부를 봐가며 미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정부 당국자는 또한 “라이스 보좌관과의 만남 계기에 박 대통령의 방미 시기 재조정과 관련해 자연스럽게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나. 한·중 관계

- 한중FTA 효과 담보하려면 中강제인증 장벽 해소돼야(6/9,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 3층 회의실에서 ‘통상 산업포럼 전자전기·전자부품 분과회의’를 열어 중국의 무역기술장벽(TBT)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음.
 - ‘중국의 TBT 현황과 대응방안·세계무역기구(WTO) 복수국 간 협정 협상 동향과 협상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는 중국 TBT에 따른 애로 해소를 통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극대화하고 WTO 다자간 협상 등 통상정책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음.
 - 업계는 지난 1일 정식 서명된 한중 FTA 효과를 담보하려면 강제인증(CCC :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과 같은 중국의 TBT가 해소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며 중국의 CCC는 우리나라의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에 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2배 이상이고 컨설팅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 참석자들은 또 WTO 복수국 간 협정인 정보기술협정(ITA)과 환경상품협정(EGA)과 관련한 협상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음.

다. 한·일 관계

- 윤병세 외교부 장관, 조만간 일본 방문 검토(6/10, 연합뉴스)
 - 아사히 신문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오는 21일 기시다 일본 외무상과 회담한 뒤 22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축하행사에 참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 앞서 지난 3월 서울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때 기시다 외무상이 윤 장관의 일본 방문을 요청한 바 있으며, 윤 장관의 일본 방문이 성사되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한일 정상회담 개최 문제가 핵심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 윤 장관은 2013년 부임 이후 아직 한 차례도 일본을 방문하지 않았으며, 2013년 4월 말 방일 예정이었지만 그 직전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자 방문 일정을 취소한 바 있음.
- **日방위상, '시대배경 따라 헌법해석 변경 가능' 취지 발언(6/10, 연합뉴스)**
 -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중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정부의 새 헌법 해석이 미래의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다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 나카타니 방위상은 안보 상황 변화에 따른 헌법 해석 변경 문제에 대해 “시대 배경과 함께 헌법이 허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민주당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고 비판했음.
 - 이런 가운데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집단 자위권 용인 방침을 반영한 11개 안보 법률 제·개정안을 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기 위해 24일까지인 회기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 **日 관방장관, “세계유산 등록 우리 생각 변함없어”(6/10, 연합뉴스)**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한 자국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음.
 - 그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권고를 존중해 기술적·전문적 견지에서 심의를 거쳐 권고한대로 세계유산 등록을 결정할 것”이라며 “본건 유산의 가치에 대해서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의 이해를 계속 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 도쿄와 서울에서 두 차례 열린 지난 한일 협의에서 한국은 각 세계유산 후보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하게 하라는 유네스코 자문기구의 권고 내용에 입각, 일본 정부에 조선인 강제징용 역사를 반영할 것을 요구했으며, 스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강제징용을 반영하라는 한국의 요구에 재차 난색을 표한 것을 풀이됨.

- 日 언론, “박근혜 대통령 방미 연기, 한일 관계에 영향”(6/11, 연합뉴스)
 - 일본 언론은 한국 내 ‘메르스’ 감염 확산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연기가 한국 외교 및 한일 관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음.
 - 닷케이 신문은 “가장 중요한 동맹국과의 예정을 연기한 ‘대가’가 있을 것”이라며 한국 외교에 ‘실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요미우리 신문은 오바마 대통령이 박 대통령에게 ‘3국 협력 강화에는 양호한 한일 관계가 필수다’라는 입장을 전할 것이었던 것 만큼 연기로 인해 한일관계의 조기 개선을 향한 실마리를 찾을 기회가 상실됐다고 주장함.
 - 마이니치 신문은 오는 이번 연기 때문에 21~22일을 중심으로 한일간에 조율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일본 방문에 유동성이 생길 수 있다고 보도했음.

- 縣지사의 세계유산등록 촉구에 문부상, “한국과 협력해 대응”(6/11, 연합뉴스)
 - 나카무라 호도 일본 나가사키현 지사가 11일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을 면담하고 하시마(일명 ‘군함도’) 탄광 등 일본의 23개 산업시설이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도록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에 대한 설득을 강화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 나카무라 지사는 아울러 건물 노후화 등이 심각한 군함도의 보전을 위해 정부가 재정·기술적 지원을 해주고 내년에 세계유산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예정인 ‘나가사키의 교회군(群)과 기독교 관련 유산’의 등록을 위해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시모무라 문부과학상은 “한국과 협력하면서 세계유산으로 인정되도록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음.
 - 나카무라 지사가 일본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한 것은 한국 정부가 조선인 강제 노동 사실을 배제한 유산 등록을 막고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임.

- 한일, 수교 50주년 행사 앞두고 고위급 상호참석 논의(6/11, 연합뉴스)
 -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일본 외무성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한국·일본 간 현안을 논의하는 8차 협의를 열었으며, 양측은 이달 22일 주일 한국대사관과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각각 열리는 수교 50주년 행사에 고위급 인사가 서로 참석하는 방안을 논의했음.

- 회의가 끝난 후 이 국장은 기자들에게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고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2일 전후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회담하는 방향으로 한국과 일본이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나카야마 야스히데 일본 외무 부(副)대신의 설명을 인용해 보도했음.
 - 또 양측 대표는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각각 자국 내에서 열리는 수교 50주년 행사에 참석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양국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으며, 한일 양국은 행사 당일인 22일 직전까지 참석자를 놓고 물밑 교섭을 계속할 것으로 보임.
- **日, 한일수교 50주년행사에 일한의원연맹 회장 파견검토(6/13,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오는 22일 주한 일본대사관이 서울에서 개최하는 한일 수교 50주년 기념행사에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보내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 보도에 따르면 일본 측은 한국이 요청한 대로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을 보내는 방안을 한때 검토했으나, 국회에서 안보관련 법안의 심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파견을 보류했음.
 - 대신 일본 정부는 누카가 회장이 작년 10월 서울을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 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메시지를 전한 점 등을 고려해 그를 대신 보내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임.
- **윤병세 외교부장관, ‘日세계유산’ 광폭 외교전…위원국 연쇄접촉(6/14, 연합뉴스)**
 -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여부를 결정할 세계유산위원회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 장관이 위원국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외교전에 뛰어들었음.
 - 윤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자그레브에서 베스나 푸시치 크로아티아 외교부장관과 회담했음. 크로아티아는 세계유산위원회 부의장국이며, 한국 외교장관의 크로아티아 방문은 1992년 수교 이후 처음임.
 - 윤 장관은 회담에서 일본의 세계유산 등재추진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비롯해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한일간 협의, 대다수 위원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위기 등을 전달했으며, 이후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 세계유산

위원회 위원국인 말레이시아의 아니파 아만 외교장관과 14일께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 윤 장관은 앞서 지난 12일 세계유산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을 방문,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외교장관과 회담한 뒤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해 독일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한 바 있음.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미·중 관계

- 미 하원 국토안보위원장, “중국이 연방정부 해킹 배후”(6/8, 연합뉴스)
 -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장이 최근 발생한 미 연방인사관리처(OPM) 대한 해킹 사건의 배후로 중국을 공식으로 지목했음.
 - 그는 “이번 해킹은 미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정보유출 사건” 라면서 “이번 해킹은 스파이 활동 목적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 해킹에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 중국 정부는 이미 중국 배후설을 제기한 언론에 “선부른 결론을 내는 것은 무책임 하고 비생산적”이라며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 상태임.
 - 국토안보부는 앞서 지난 4일 OPM 전산시스템이 4월 말부터 해킹당해 전·현직 연방공무원 40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면서도 배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음.
- 중국 외교부장, 9월 열병식에 미군 초청 시사(6/8, 연합뉴스)
 - 왕 부장은 이날 홍콩 봉황위성 TV와 단독 인터뷰에서 ‘제2차대전 동맹국이자 항일전쟁에도 참여한 미군을 열병식에 초청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매우 많은 국가의 군대를 초청했다”면서 “이들은 우리와 함께 경축의식 활동을 거행 하거나 참여함으로써 다 함께 선열을 기리고 역사를 깊이 새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 이는 직접적으로 ‘미군’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당국이 미군 측에 열병식에 함께 참여하거나 적어도 미군의 고위급 대표단 참석을 요청했음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됨.
- 중국은 올해 제2차대전 및 항일전쟁 승리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9월 3일을 전후해 베이징에서 기념대회, 열병식, 초대회, 문화예술 행사 등을 포함한 기념활동을 거행할 계획임.

■ 중국군 수뇌부, 남중국해 갈등 속 미국 방문(6/9, 연합뉴스)

-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판창룽 중국 중앙 군사위원회 부주석은 군 대표단을 이끌고 베이징을 떠나 미국과 쿠바에 대한 공식 우호방문을 시작했다고 중국 국방부가 이날 밝혔음.
- 이들은 미국 샌디에이고 해군기지를 방문, 원자력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를 참관하고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등 미군 기지 3곳을 방문하며 시애틀의 보잉사 공장도 찾을 예정임.
- 판 부주석과 카터 장관의 회담은 오는 11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며,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남중국해 문제와 인터넷 안보 문제가 양국이 논의할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 판 부주석 일행은 미국 방문 이후 쿠바도 공식 방문하며, 이는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와 관계없이 중국과 쿠바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유지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됨.

■ FT, “남중국해는 미국의 아시아 영향력 시험대”(6/11, 연합뉴스)

-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는 ‘미국 대 중국, 신냉전인가’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통해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주도적 지위에 점진적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 이 신문은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출혈을 감수할 가치가 없는 사소한 문제들로 싸움을 걸고 있지만 이를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시아 내 미국의 패권에 맞서려는 중국의 야심이 드러나고 있다고 해석했음.
- 중국의 인공섬 건설이 국가간 협력에는 어긋나지만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며, 규모가 크다는 점 외에는 필리핀이나 베트남 등 영유권분쟁 상대국들의

인공섬 건설과 별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실제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임.

- FT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고는 시리아 정권에 대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금지선(레드라인)’ 언급과 마찬가지로 ‘소리는 크지만 손에 든 막대는 작은’ 격이라고 비판함.

■ 카터 미 국방장관, 중국군 고위방문단과 ‘인공섬’등 논의(6/12, 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는 이날 오전 애슈턴 카터 장관이 판창룡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비롯한 방문단과 만나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건설 중인 인공섬을 비롯한 지역 안보 문제와 미·중 양국 간 군사협력 방안 등이 이날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 카터 국방장관과 중국군 대표단은 면담 이후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고, 미국 국방부는 이에 대해 “중국 측이 이번 방문에 대해 언론의 관심이 지나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 한편, 판 부주석을 비롯한 중국군 방문단은 미국에 이어 쿠바도 방문할 예정이다.

■ 중국 해커, 미 관료와 가까운 중국인 명단 빼간 듯(6/12, 연합뉴스)

- 뉴욕타임스(NYT)는 OPM 해킹사건 조사관들을 인용, 중국의 해커들이 미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중국인 친척 또는 친구, 공무원들이 최근 접촉한 외국인들의 명단 등을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 해당 공무원의 범위에는 외교관, 백악관 직원, 핵 전문가, 무역협상 전문가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관료들도 포함되며, 정보 당국은 정확히 얼마나 많은 수의 명단이 유출됐는지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 미 국제전략제연구소(CSIS)의 사이버 전문가 제임스 루이스는 “그들은 NSA가 통신기록을 수집하듯이 이런 정보들을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로 빨아들이고 있다”며, “중국이 입수한 명단을 대외 접촉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 미·일 관계

- 日방위성, “미일 공동개발 요격 미사일 발사실험 성공”(6/8, 연합뉴스)
 - 일본 방위성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근교의 미국 해군 포인트 머그 사격장에서 미사 일방어(MD)의 일환으로 미일이 공동개발 중인 해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 ‘SM3블록2A’의 첫 발사실험이 성공했다고 교도통신이 밝혔다.
 - ‘SM3블록2A’는 현재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에 탑재돼 있는 ‘블록1A’의 개량형으로, 사거리와 명중률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양국 정부가 2006년도에 공동개발을 시작했으며, 2017년께 개발을 마친 뒤 해상자위대에 배치할 예정이다.
 - 미일은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한 새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서 자위대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는 사례로 탄도미사일 요격을 제시한 바 있음.

- 美 태평양사령관, “남중국해는 공해, 일본 작전활동 환영”(6/12, 연합뉴스)
 -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해리스 사령관은 이날 일본 도쿄도에서 열린 일본 언론과 의 회견에서 “남중국해는 공해이며 영해가 아니다. 일본이 (그곳에서) 작전을 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 해리스 사령관은 중국이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것을 미국이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방공식별구역을 남중국해까지 확대하더라도 이것이 미군의 행동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그는 미국해군이 내년 환태평양 합동군사훈련(림팩)에 중국군을 초대했지만 이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며 중국의 남중국해 움직임을 견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 中 군사위 부주석, 미국 항일노병들 만나 아베 비난(6/13, 연합뉴스)
 - 미국을 방문 중인 판창룡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과거 중국의 항일전쟁을 지원했던 미국의 참전 노병(플라잉 타이거 소속)들을 만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역사인식을 강하게 비난했다.
 - 판 부주석은 이날 미국이 항일전쟁에 큰 공헌을 했다고 평가하며 “오는 9월 베이징 에서 열리는 2차 대전 70주년 기념 활동(열병식)은 결코 일본국민과

- 일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주요 목적은 역사를 돌이켜보고 군국주의 부활에 반대하며 이를 막자는 데 있다”고 말했다.
- 그는 또 “일본 침략자들 때문에 중국에서는 3천500만 명이 죽거나 다쳤지만 아베 정부는 여전히 2차 대전 성과를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지금도 아베와 현 일본 정부는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독일이 했던 그런 사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난했음.
 - 판 부주석 등 중국군 고위방문단이 이번 방미 과정에서 과거 항일전에 참전해 큰 희생을 치른 미국 참전 군인들을 만나 아베 정권의 역사 인식 문제를 거론한 것에는 미국도 일본 우경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됨.

사. 미·러 관계

- 오바마 대통령, G7회의서 ‘대러시아 경제제재 지속’ 주문(6/8, 연합뉴스)
 -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크뤼에 도착해 이날 현지 주민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의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톱 어젠다’라고 밝혔음.
 -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대러시아 경제 제재를 이어간다는 데 뜻을 같이한 데 이어, 다른 정상들과도 잇따라 만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음.
 - 이러한 조치는 루블화를 약화시킬 게 분명하며 궁극적으로 러시아 국민의 불만을 야기함으로써 푸틴 대통령의 기반을 흔들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됨.
 - 하지만,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대한 무기 공급에는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오바마 대통령, “푸틴, 소련 영광 재현 위해 경제 파탄시켜선 안돼”(6/9,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옛 소련 제국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잘못된 야망을 추구하면서 자국 경제를 파탄시킬지름 속고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G7 국가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교전사태를 끝내기 위한 민스크 협정을 준수할 때까지 대러 제재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만일 필요하면 강력한 추가적 대러 제재를 가할 준비가 돼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한편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 공보비서는 G7 정상들의 공동선언문에 담긴 대러 제재 연장 합의와 관련한 부분에 대한 논평을 요청받고 “아무 것도 새로울 게 없다”고 언급하며,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임.
- 미 재무장관, “대러 추가제재 준비”…G7 경고 반복(6/10, 연합뉴스)
 - BBC 방송 러시아어 인터넷판 등에 따르면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아르세니 야체누크 우크라이나 총리와의 회담에서 “미국과 주요7개국(G7)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러시아의) 공세적 행동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에 심각한 추가 제재를 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 서방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민스크 협정(평화협정)이 무산되면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가한다는 입장이지만, 당분간은 기존 대러 제재를 연장하는 선에서 러시아의 공세에 대처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음.
 - 러시아는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면서 민스크 협정은 중재 자일 뿐 협정 이행 의무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첫 외교무대 접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푸틴은 강패” (6/11, 연합뉴스)
 -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권 주자 접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외교 데뷔 무대인 유럽 3개국 방문에서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에 상응하게끔 동유럽 지역에 미군 수 천명을 추가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AP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음.
 - 부시 전 주지사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강력한 물리력으로만 억제될 수 있는 “강패(a bully)”라고 부르며 “나는 (러시아와) 싸우자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의 대응이 가져온 상황(결과)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며 “그런 방안(병력 증파)이 우리가 보기를 원하지 않는 나쁜 결과를 막아줄 것”이라고 주장함.
 - 부시 전 주지사는 독일 방문에 이어 폴란드, 에스토니아를 차례로 방문하고 나서 미국으로 돌아가 오는 15일 공식 대선 출마를 선언할 계획임.

- 러 전투기, 미군 정찰기 3m 거리서 아찔한 위협 비행(6/12, 연합뉴스)
 - 미국 CNN 방송지난달 30일 러시아 수호이(Su)-27 전투기 1대가 흑해의 공해 상공을 날고 있던 미군 정찰기에 3m 거리로 접근해 같은 고도에서 나란히 비행하다가 이후 속도를 다소 낮춰 근거리에서 한참 동안 미행 비행을 한 뒤 해당 구역을 벗어났다고 전했다.
 - 3m는 군용기 창을 통해 조종사들끼리 서로 얼굴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근접 거리로 자칫 충돌 사고가 빚어질 수 있는 위험한 비행이었으며, 미군 정찰기도 그러나 러시아 전투기로부터 이탈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방송은 소개했음.
 - 미국은 이날 러시아 전투기의 근접 비행을 위험한 도발로 규정했으나 외교 채널을 통해 공식 항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아. 중·일 관계

- 중국, 무인기로 센카쿠 열도 주변 정기 감시 검토(6/12, 연합뉴스)
 -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인민해방군의 무인기 전문가는 당국이 선박에 의지하는 현재의 (센카쿠 열도)순시 활동만으로는 임무 수행을 완수하기 어렵다며 무인기를 동원해 감시활동을 정기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함.
 - 이 전문가는 미국이 무인기 ‘글로벌호크’로 동중국해에서 정찰을 반복하고 있고 이 지역에서 일본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이 격화한 것 등을 이 같은 주장의 배경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군은 무인기를 50여 대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항속거리가 4천km로 길고 20시간 넘게 연속 비행이 가능한 ‘이룡(翼龍)’이 동중국해 투입에 최적인 기종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 중국, 동중국해 연안 대규모 기지 추진…센카쿠 겨냥(6/13, 연합뉴스)
 - 중국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와 가까운 해안에 대규모 기지 건설 계획을 추진 중인 것이 확인됐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3일 보도했음.
 -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해경국은 저장성 원저우시 바닷가에 ‘원저우시휘종합보장

기지'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기지는 부지 면적 약 50만㎡, 배를 대는 선착장의 안벽(岸壁) 길이 1천200m, 배수량 1만t급에 달하는 배까지 대형 선박 6척이 정박 가능한 규모로 추진되고 있음.

- 이곳에는 비행기나 헬기의 격납고, 대형 훈련 시설이 함께 건설될 예정이며 총 공사비 33억4천만 위안(약 6천7억원) 전액을 중국 중앙정부가 부담함.
- 요미우리는 원저우시와 해경국 등 관계기관이 개최한 기지 건설 관련 회의에서 이런 구상이 다뤄졌으며 관련 내용이 저장성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가 최근 삭제됐다고 전했다.

자. 중·러 관계

■ 러시아·중국, 내년 5월 남중국해서 연합군사훈련(6/8, 연합뉴스)

- 러시아와 중국이 지난 5월 지중해에서 연합군사훈련을 한 지 1년 만에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에서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음.
- 하지만 러시아는 중국과 새로운 밀월관계에 들어섰지만 베트남과 전통적으로 우호 관계여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중국을 일방적으로 지지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음.
- 러시아와 중국 양국 해군은 상대국 함대의 관할해역을 상호 방문하면서 연합훈련을 실시하는데 내년 남중국해 연합훈련은 러시아 함대가 중국 남해함대 관할해역인 남중국해를 방문하는 순서라는 것임.

차. 일·러 관계

■ 아베 총리, 메르켈·올랑드에 “푸틴과 대화하겠다”(6/8,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올랑드 대통령에게 쿠릴 4개섬(일본 명 북방영토) 문제 해결을 위해 푸틴 대통령과 향후 회담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 아베 총리는 쿠릴 4개섬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푸틴 대통령의 연내 일본

- 방문에 강한 의욕을 보여왔으며, 지난 4월말 미일 정상회담 때 이 뜻을 베타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고, 지난달 푸틴 측근인 세르게이 나리슈킨 러시아 하원의장과 도쿄에서 만나 일본의 '진심'을 전하기도 했음.
- 2013년 아베 총리와 푸틴 대통령이 쿠릴 4개섬 문제에 대한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속에 협상은 진척을 보지 못했음.
 -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서방과 러시아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베 총리가 러시아와의 독자적인 외교 구상을 밝힘에 따라 서방의 대(對)러시아 제재 대오 균열을 둘러싼 논란이 재발할 전망이다.

© 국제전략연구실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HRW “북, 상업 활동 주민 착취”(6/8, 자유아시아방송)
 - 휴먼라이츠워치는 8일 성명을 내고 북한 당국이 장사 등 개인적 상업 활동에 나선 북한 주민들을 ‘경제적 범죄’ 혐의로 불공정하게 기소하고 임의로 구금, 또 강제 노동에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 따라서 북한 형법에서 ‘경제적 범죄’ 조항을 삭제하고 이러한 행태를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는 것임.
 - 이 단체는 2013년 이후 북한을 떠난 탈북자 중 장사 경험이 있는 12명을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놓은 성명을 통해 개인적 상업 활동을 이유로 당국에 적발되면 그들의 운명은 뇌물을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연줄 동원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 또 북한 당국이 특별히 노동 동원 수요가 많을 때 뇌물을 바칠 능력이나 연줄이 없는 북한 소상공인들의 구금과 강제 노동 기간이 길어진다고 지적했다.
 - 휴먼라이츠워치 존 시프톤 아시아옹호국장은 북한 당국의 묵인 하에 북한 주민들이 장사를 비롯한 개인적 상업 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북한 보위부원이나 경찰은 자신의 입맛에 맞게 이들을 단속해 주민들의 돈이나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의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북한이 1981년 비준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ESCR)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또 이른바 ‘경제적 범죄’를 이유로 주민들을 임의로 구금하고 강제 노동에 내모는 것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 당국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한 노동에 의해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인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 북, 주민감시에 어린이까지 이용(6/10, 자유아시아방송)
 - 밀수와 마약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김정일 시대 북한의 사법기관들은 한동안 같은 인민반이나 직장 동료들의 비행을 무기명으로 써서 바치도록 했는데

주민들이 절대로 거부할 수 없도록 갖은 방법을 동원해 강요했음.

- 이 같은 사실을 전한 소식통들은 “그 당시에도 사회적 동요나 주민들의 반감을 우려해 중앙에서 조직한 검열대의 조사에서만 이런 방법을 제한적으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 최근 국가보위부가 주민들의 감시와 단속을 위해 김정일 시대의 유치한 조사방법을 다시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이야기했음.
 - 심지어 소학교 학생들에게도 이런 조사방법을 적용해 주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 함경남도의 한 소식통은 “학교 담당보위지도원들이 최근에 있는 마약범죄 집중조사에 소학교(초등학교) 학생들을 악용하고 있다”며 “이런 사실에 학부모들은 말할 수 없이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 함흥시 사포구역의 한 담당보위지도원은 마약범죄 집중조사기간에 만 7살밖에 안 된 소학교 학생들 앞에서 마약흡입 도구를 칠판에 그려놓고 어린 학생들에게 “이것이 무엇이나?”고 일일이 캐물었다고 소식통은 언급했음.
 - 이에 많은 학생들이 마약흡입기의 북한식 은어인 ‘코나팔’, ‘코피리’라는 이름을 대답한 학생들을 모두 기록했다가 그들을 한 명씩 따로 불러 마약흡입기구의 이름을 알게 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 보위지도원의 협박과 회유에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부모들이 마약을 흡입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그는 말했다.
 - 이를 근거로 함흥시 사포구역에서 술한 학부모들이 마약범죄자로 검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 이와 관련 9일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도 “인민반마다 매 주민들에게 주변의 마약범죄 자료들을 무기명으로 써서 바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김정일조차 민심이반을 우려해 중단했던 조사수법을 김정은 시대에 되살려 놓았다”고 맹비난했음.
- 북한, 해외파견 근로자 인권침해 부인…“참을 수 없는 모독”(6/11, 연합뉴스)
- 북한이 해외파견 근로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며 11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 북한은 남한이 북한의 해외파견 근로자 인권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모략’이며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남조선 괴뢰패당이 우리 해외파견 근로자들의 ‘인권’ 문제라는 것을 고안해내 또 하나의 반공화국 모략 광대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 대변인은 “이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훼손하려는 용납 못 할 도전이고, 부강조국 건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며 “전체 노동계급의 이름으로 단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 대변인은 남한이 탈북자들을 내세워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해외파견 근로자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 대변인은 과거 남한의 해외파견 근로 전례를 지적하며 험담하기도 했음.
 - 그는 “사람들은 박정희 역도가 ‘인력수출’을 떠벌이며 수많은 남조선 인민들을 광부로, 간호원으로 해외의 고역장에 내몰아 피땀의 대가를 강제 수탈하고, 남조선 도처의 미군기지촌에 수십만명의 여성을 성노예로 들이민 추악한 반인권적 죄악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비난했음.
- “11일 국경 넘다 중국군에 사살된 북한인은 일반 주민”(6/14, 데일리NK)
 - 지난 11일 새벽 중국 지린(吉林)성 옌변(延邊) 조선족자치주 허룽(和龍)시에서 중국군에 의해 사살된 북한인은 무장한 군인이 아니라 일반 주민이라고 소식통이 알려왔음.
 -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14일 “당시 새벽 조선(북한) 주민 2명이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중국군에 의해 발각됐고, 체포 명령에도 도망치자 발포한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한 명은 목숨을 잃었고, 나머지 한 명은 달아났다”고 전했다.
 - 이어 소식통은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인근에서 중국 군인이 대거 파견돼 달아난 조선 주민 수색에 나섰다”면서 “아직까지 체포됐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지만, 많은 군인이 투입된 만큼 조만간 잡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 충격 사건이 발생한 허룽시는 지난해 말과 올해 4월에 북한 탈영 군인이 국경을 넘어와 강도 행각을 벌이다 중국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지역이며 이후 중국 당국은 이 지역에 국경부대를 추가로 배치하는 등 치안을 강화했음.
 - 소식통은 “최근 들어 불법 월경한 조선인에 의한 중국인 살해 사건이 연속적으로 벌어지자 중국 당국은 ‘불법 월경자가 체포 명령을 거부하면 즉시 사살해도 좋다’는 지침을 하달했다”면서 “중국 군 당국은 북한 당국에 이와 관련해 여러 차례 구두(口頭)로 경고하기도 했었다”고 전했다.

- 이어 그는 “이번 사건으로 김정은은 주민들의 탈북에 대한 경계와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먹을 것이 부족해 탈북한 주민들은 조선과 중국 군인들의 총알을 피해야 하는 현실에 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2. 북한 인권

- 오스트리아서 ‘북 인권 탄압 처벌’ 촉구(6/8, 자유아시아방송)
 - 오스트리아 즉 오지리 서부 도시 잘츠부르크의 민간단체 ‘잘츠부르크 글로벌 세미나 (Salzburg Global Seminar)’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재차 촉구하는 인권 행사(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A Call to Action)를 개최했음.
 - 이 단체의 에드워드 모티머(Edward Mortimer) 프로그램 담당 선임고문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과 행동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음.
 - 이 회의에는 마이클 커비 위원장과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 세 명을 비롯해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정계, 시민사회, 법조계, 학계 전문가 등 45명이 참석했음.
 - 미국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 한국 외교부의 이정훈 북한인권대사, 국제인권단체 연합체인 ICNK 권은경 사무국장,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요한나 호사냐 부국장, 그리고 탈북자로서는 유일하게 영국 런던의 유럽북한인권협회(EAHRNK) 박지현 간사 등이 참석했음.
 -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개최된 토론회는 5일에 걸쳐 하루 9명씩 총 45명이 각자의 분야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음.
 - 모티머 고문은 지난해 발표된 370여 쪽의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지적한 대로 현대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북한의 인권 유린 참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의식에서 비롯된 회의라고 밝혔음.
 - 따라서 이 단체가 8일 발표한 성명은 북한 당국이 유엔의 접근을 허용하고 주민을 보호할 국제 의무를 이행할 것과,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계속 조사하고 기록해 나갈 유엔 현장사무소에 대한 지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권고를 이행하고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고 밝혔다.

- 또한 대북 정보유입과 탈북자 역량을 증강시키고 해외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는 방안 등도 다뤄졌음.

■ 미주한인교회연합, 7월 워싱턴서 대규모 북한인권 행사(6/8, 미국의소리)

-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한인교회연합 KCC’는 오는 7월 14일부터 이틀 동안 워싱턴에서 다양한 북한인권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KCC의 샘 김 사무총장은 5일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면서, 올해 행사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는 북한 제재 이행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북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미 의원들에게 북한 제재 이행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호소할 계획이라는 것임.
-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겨냥한 북한 제재 이행법안은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을 통과하지 못해 자동폐기 되었고, 올해 같은 내용의 법안이 다시 하원에 상정돼 있는 상태임.
- 샘 김 사무총장은 또 법 제정 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북한어린이복지법, 이른바 북한고아입양법과 관련해 행정부의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KCC는 이와 함께 미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한인 2세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것도 올해 행사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 특히 북한 ‘꽃제비’ 출신으로 미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최근 영어로 ‘같은 하늘 아래’라는 책을 펴낸 조셉 김 씨가 학생들에게 북한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참가자들은 행사 첫 날인 14일에는 백악관 앞에서 북한인권 회복을 위한 집회를 가진 후 백악관을 따라 행진하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을 촉구할 예정임.
- 이어 15일에는 국회의사당 잔디밭에서 연방 하원의원 등 다수의 연사들을 초청해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과 탈북자들의 아픔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할 계획임.
- 이후 연방 상하원 의원의 사무실을 방문해 직접 북한인권 실태를 설명하고 의원들의 응답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임.

- “러시아 파견 北노동자, 천 달러 바치고 밤에 ‘일바’” 소식통 “北근로자, 월 800~1000달러 상납하고 개인별이 노동”(6/9, 데일리NK)
 - 러시아를 최근 다녀온 한 소식통은 “최근 러시아 건설에 동원된 북한 노동자들이 사업소 공동 노동이 아닌 개별 사업장에서의 노동을 통해 개인 돈벌이를 하고 있다”면서 “단 월에 800에서 1000달러에 달하는 돈을 사업소에 바치는 조건으로 외부작업 승인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 이어 소식통은 “사업소 공동 작업을 통해 번 돈 대부분은 바치고 일부는 생활비를 쓰고 별도의 일을 통해 번 돈 대부분을 북한의 가족들에게 보내고 있다”면서 “특히 사업소 내 감시의 눈을 피하기도 좋고 개인 돈벌이도 쏠쏠하기 때문에 대부분 노동자들이 외부 작업을 선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소식통에 따르면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은 해당 사업소 내 당 조직의 관리와 보위부원의 감시를 받으며 노동을 하고 있음.
 - 하지만 사업소가 제시한 월 800~1000달러를 바치면 외부 일을 승인 받고 일과 시간 이후인 저녁이나 주말에 감시를 받지 않고 노동을 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 소식통은 또 “러시아에 파견된 조선 노동자들 중 건설업에 동원되는 주민들은 벌목쪽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보다 많은 액수의 월급을 받는다”면서 “건설업에 동원되는 노동자들은 기술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보수가 많다”고 설명했다.
 - 그러면서 소식통은 “건설현장에 동원된 노동자들의 경우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송금브로커를 통해 고향에 보내기도 하는데 1년에 보통 2000~3000달러를 보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 끝으로 소식통은 “대부분 노동자들이 월급의 대부분을 징수하는데 대해 불만을 갖고 있지만 북한에서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불만을 삭이고 있다”면서도 “일부이지만 ‘우리나라는 노동자들을 돈 나오라면 돈 나오는 보물주머니라고 본다’는 말로 주민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당국을 비난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말했다.
- 세계 각지서 북한 인권 유린 규탄 행사 잇따라(6/9, 연합뉴스)
 - 세계 각지에서는 9일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규탄하거나 대북 제재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 캐나다 연방의회는 북한의 인권 실태를 감시하고 보고할 북한인권대사 임명과 비정부기구들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음.
 - 캐나다 연방의회의 자유당 소속 어윈 커틀리 의원은 지난 3일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했음.
 - 결의안에는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의 인권 상황과 탈북자 실태를 감시하고 보고하는 북한 인권대사의 신설과 중국 등지의 탈북자들을 돕는 비정부기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도 담겼음.
 - 탈북자들의 캐나다 난민 지위 신청과 획득을 쉽게 하자는 내용도 포함됐음.
 - 또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한인교회연합’은 다음달 14~15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앞과 국회의사당 잔디밭에서 북한인권 관련 행사를 열 예정임.
 - 미주한인교회연합은 행사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탄압 실상을 알리고 대북 제재 강화를 촉구하기로 했음.
 -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해선 북한 ‘꽃제비’ 출신으로 미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조셉 김 씨가 사례를 들어 설명함.
 - 특히 연방 하원의원 등을 초청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북한 정권을 압박하고자 미국 의원들에게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호소할 계획임.
 - 이 법안은 지난해 하원에서 가결됐지만 상원을 통과하지 못해 자동 폐기돼 같은 내용의 법안이 올해 다시 하원에 상정된 상태임.
- G7 정상 선언, 북한 핵 개발 인권 비난(6/9, 미국의소리)
-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주요 7개국 정상들이 북한의 핵 개발과 인권 문제를 비난했음.
 - 주요 7개국 정상들은 8일 독일에서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정상 선언’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계획의 지속과 인권 유린, 외국인 납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음.
 -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가 참여하고 있음.
 - 이에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일 열린 정상회의 실무만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동북아시아 지역과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음.

- 아베 총리는 또 자신은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납치는 인권 침해이자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사안인 만큼 문제 해결에 주요 7개국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음.

■ 與, 북한인권법 ‘패스트트랙’ 논의 본격 시동(6/10, 연합뉴스)

- 새누리당이 북한인권법의 19대 국회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지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음.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그동안 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과 여러 차례 만나 북한인권법 제정안의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오늘 오전 여당 소속 외통위원들 모임을 갖고 그 내용을 설명했다”고 말했음.
- 새누리당은 일단 여야 합의를 통해 북한인권법을 처리한다는 전제 하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신속처리안건 지정이라는 ‘극약 처방’도 불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심 의원은 “패스트트랙 지정이 결정되면 6월말에는 해야 하고, 그러려면 의원총회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이와 관련,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할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를 빌미로 다른 법안에 대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음.
-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후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간 심사하고 법사위로 넘어가 다시 9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회부됨.

■ 30개국 인권단체들, 북한 사형제도 문제점 논의(6/11, 연합뉴스)

- 북한의 적법한 절차 없는 사형 선고와 집행의 문제점이 11일부터 이틀간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논의됨.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세계 30개국 300여 단체가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사형제도 폐지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보도했음.

- 이번 토론회는 프랑스의 사형제 폐지운동 단체인 ‘사형제 반대 동반자 (ECPM)’와 ‘아시아 사형폐지 네트워크(ADPAN)’가 공동으로 주관함.
 - 토론회에 참석하는 각국 대표들은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자행되는 공개·비공개 처형, 강요된 자백에 의한 사형, 경범죄로 말미암은 사형 집행 등 국제 규약 위반 사항을 비판하고 북한 측에 개선을 촉구할 예정임.
 - 미셸 키센카터 국제인권연맹(FIDH) 아시아담당국장은 “북한은 사형 집행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나라 중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가진 곳”이라며 “북한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통일 한국, 북한 인권침해 문제 대비해야”(6/11, 연합뉴스)
 - 남북통일 이후 새 정부에서 북한 인권침해 문제가 대두할 것이며 이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음.
 - 백범석 경희대 교수는 11일 고려대에서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등의 주최로 열린 ‘전환기 정의와 북한’ 워크숍에서 “국제 행위자들의 역할 강화로 통일 과정에서 북한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대두할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음.
 - 전환기 정의란 한 국가가 체제전환 후 과거 정부의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는 정책을 의미함.
 - 백 교수는 “통일과정에서 국제 행위자들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남북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전환기 정의를 다룰 수 있는 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북한의 경우 인권침해를 논함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전환기 정의 실현에 있어 정치·사회적 안정과 정의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북 인권유린에 구체적 제재 필요”(6/12, 자유아시아방송)
 - 지난달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 대북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던 미국의 코리 가드너(Cory Gardner) 연방 상원의원 측이 거듭 강력한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거론했음.
 - 가드너 의원의 이고르 크레스틴(Igor Khrestin)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은 12일 미국 워싱턴 DC 헤리티지재단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 정권을

- 변화시키기 위한 인권유린 관련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인권유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것임.
 - 크리스틴 보좌관은 앞서 참혹한 북한의 인권상황을 고발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왔지만 이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음.
 - 그러면서 정책적 측면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이 사안을 결코 소홀히 다루선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3. 탈북자

- 스웨덴 이민국, 꽃제비 소년 '탈북자' 판정(6/8, 자유아시아방송)
 - 함경북도 꽃제비 출신이라며 스웨덴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스웨덴 이민국이 조선족으로 추정해 추방을 명령했던 소년에 대해 재조사를 통해 최근 탈북자라는 결론을 내렸음.
 - 소년의 변호를 담당해 온 스웨덴인 아리도 데가브로 변호사는 지난 주말 스웨덴 이민국 담당자와 면담한 결과 소년을 북한 국적자(North Korean nationality)로 결론 내렸다는 이민국의 결정을 들었다고 밝혔음.
 - 스웨덴 이민 법원은 지난 3월 스웨덴에 난민 신청을 한 소년에 대한 스웨덴 이민국의 추방 명령에 대해 이민국의 재심사를 판결했음.
 - 데가브로 변호사가 한국의 인권단체 북한정의연대와 북한인권시민연합 등을 통해 입수한 새로운 증거자료를 보면 소년이 함경북도 출신 탈북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임.
 - 데가브로 변호사는 그러나 소년이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 고초를 겪을 위험은 사라졌지만 그가 원하는 대로 스웨덴에 살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전했음.
 - 소년이 2013년 스웨덴에 도착한 후 2년 여 동안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갖게 되면서 스웨덴에 거주하길 원하고 있지만 탈북자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자로 간주돼 한국에 정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임.
 - 데가브로 변호사는 따라서 이민국에 최종 변론을 제출하고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 스웨덴 이민국이 의뢰한 한국어 언어 분석관은 북한 지명이나 꽃제비의 생활 실태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소년의 난민 자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소년이 조선족이라는 오류를 범했다는 스웨덴 언론과 변호인측의 지적을 받았었음.
 - 그러나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함경북도 출신 탈북자를 통해 소년의 난민 자격 심사 과정에 대한 녹취를 분석한 결과 소년이 이 지역 출신이라는 분석을 제기한 바 있음.
- 탈북 대학생 7명 다음 달 미국 연수...“민주주의 발전 과정 배워”(6/11, 미국의소리)
 -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남북나눔운동(KAS)이 한국의 북한인권시민연합과 함께 다음달 워싱턴에서 제4차 리더십 프로그램(WLP)을 시작함.
 - 남북나눔운동의 나승희 대표는 다음달 3일부터 24일까지 한국 내 탈북 대학생 7명과 남한 대학생 3명 등 1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말했다.
 - 탈북 대학생들은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으로 한국의 서강대와 고려대, 한동대 등에 재학하고 있음.
 - 이들은 3주 동안 워싱턴과 뉴욕에서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우드로 윌슨센터, 유엔본부, 오픈 소사이어티, 휴먼 라이츠 워치, ‘VOA’ 본사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연구기관, 단체, 언론사를 견학하며 강의를 들을 예정임.
 - 나승희 대표는 특히 올해는 미국과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과 북한 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맞춤형 준비 방안을 생각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 워싱턴 리더십 프로그램은 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글로벌 리더 양성에 집중해 오다 지난 2012년부터 통일 리더에 초점을 맞춰 탈북 대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4. 이산가족

- 커크 상원의원, 이산가족 공청회 개최(6/9, 자유아시아방송)
 - 커크 의원은 지난 8일 지역구인 미국 중북부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서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음.

- 이날 시카고 연방법원 건물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커크 의원과 보좌관들, 이산가족 단체 대표들 그리고 지역 정치인 등 50여 명이 참석했음.
- 커크 의원은 북한에 있는 가족과 다시 만나려는 한인 이산가족의 사연들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북한 가족과의 상봉을 주선하는 브로커의 존재와 비용 등을 자세히 물었다고 미국 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의 이차희 사무총장이 전했다.
- 이 사무총장은 커크 의원이 지난주 상원에도 이산가족상봉결의안을 제출했다면서 다음 주로 예정된 한국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맞춰 결의안을 제출했다는 설명을 했다고 전했다.
- 또한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의회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이산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음.
-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의 커크 의원과 민주당의 마크 워너 상원 의원이 지난 3일 상원 외교위원회에 공동으로 ‘한국전쟁으로 인해 북한 내 친척과 헤어진 한국계 미국인의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S.RES.190)을 제출했음.
- 결의안은 미국 국무장관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음.
- 북한이 한국계 미국인들과 북한 내 친지들의 상봉을 허용할 것을 권장하면서, 이는 북한이 취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인도주의적 행보인 동시에 한반도 평화에도 기여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 커크 의원은 자신이 개최한 이산가족 공청회에서 고령의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들의 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이들은 60년이 넘게 북한 내 친지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연락을 취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 커크 의원과 워너 의원은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됐음.

5. 납북자

- 특이사항 없음.

6. 국군포로

- 특이사항 없음.

7. 대북지원

- 프 NGO, 대북지원사업 일부 종료(6/12, 자유아시아방송)
 - 프랑스의 민간 구호단체인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Triangle GH)는 북한 노인 약 7천 500명에 대한 생활 지원 사업을 최근 종료했다고 밝혔다.
 - 프랑스 국제개발처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3월부터 1년 기한으로 진행한 지원 사업으로 보살피 줄 가족이 없는 노인에 거주 시설을 제공하거나 낡고 위험한 집에 사는 노인들의 생활 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했음.
 - 또한 황해북도 소흥시의 유아원과 학교에 하루에 최대 58만 리터의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지원 사업은 지난해 말 종료됐음.
 - 이 사업으로 소흥시 인근 1만 1천600명의 주민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음.
 - 프랑스 리옹에 본부를 둔 이 단체의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시작한 평양과 남포에 있는 양식장에서의 기술 지원은 계속된다고 밝혔다.
 - 북한 농업성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물고기 생산 증대사업을 통해 어린이들에 단백질을 공급하고 있음.
 - 농사와 양어를 통합하는 농장 체계를 통해 토질을 개선하고 물고기 생산량을 늘리려는 협력 사업임.
 - 양어장에서 단순히 물고기만 기르는 것이 아니라 작물도 재배하고 가축도 사육해 상승효과를 꾀한다는 설명임.
 - 2016년 3월까지 북한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할 ‘은퇴자시설에 사는 노인들의 식량문제 개선 사업’은 유럽연합 국제개발청(EuroAid)으로부터 지원 받은 약 100만 달러로 27개월 동안을 북한에서 진행됨.
 - 우선 지원 대상은 조선노인연맹 중앙회와 지역위원회 소속 180명과 은퇴자 시설에 거주하는 7천200여 노인들임.

8. 북한동향

- 【「직총」대변인 담화(6.11)] 남한이 북한의 해외파견 근로자들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영상을 훼손하려는 용납 못할 도전이고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며 '괴뢰패당의 반공화국 인권 모략책동을 박살내고야 말 것'이라고 위협(6.11,중앙통신·중앙방송)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